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5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정답 및 해설

1. ⑤ 2. ① 3. ⑤ 4. ② 5. ② 6. ②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③ 17. ④ 18. ⑤ 19. ② 20. ③

1. 정치의 두 가지 방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첫 번째 줄의 ‘법에 의지하는 것’에서 법을 통한 지배를, 두 번째 줄의 ‘힘에 의지하는 것’에서 힘을 통한 지배를 추론할 수 있다.

2. 국가의 역할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지니는 정치 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준다. 주권자는 그 권한을 통해 개인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

오답피하기 ② (가)는 국가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③ ‘위로부터의 지배 체제 확립’이라는 진술은 제시문 (나)의 국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는 결사체에 대한 강조와 대비된다.

④ (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시민 단체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시민 단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홉스는 국가의 역할을 개인의 자유 신장까지 본 것은 아니고, 단지 개인의 자유 보존이나 보호 정도로만 보았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투쟁에서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한편, (나)는 토크빌의 진술로서, 권력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일반 의지를 강조한 학자는 루소이다.

3.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가)에 들어갈 말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존중하며, 국가 권력 창출과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권력 분립 등이 필요하다.

오답피하기 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문화 국가주의’에 해당한다.

②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평화 통일주의’에 해당한다.

③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주의’에 해당한다.

④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평화주의’에 해당한다.

4. 국제법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UN)의 산하 기구로서, 국내 사법 기관과 달리 원칙적으로 분쟁 관련 당사국의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조정한다. ㄱ.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ㄴ. 조약은 국가 간, 국제 기구와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할 때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국가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ㄷ.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안적 분쟁 해결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무총리, 국무회의 등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하여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 국무 총리제,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6.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구별

정답 해설 : (가)와 관련된 헌법 조항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나)와 관련된 헌법 조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②).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③). ②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영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므로, (가)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자유권이다.

오답피하기 ①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면 실업이 감소할 수 있다.

③, ④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본권에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⑤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등은 모두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7.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비교

정답 해설 : A국의 현재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ㄷ.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에게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할 수 있어 정국이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ㄹ.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고, 여러 후보 중 한 사람만 당선된다. 따라서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오답피하기 ㄱ, ㄴ. 학력에 따른 투표율, 정당의 대표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8. 권력 분립과 국가 기관의 구성 파악

정답 해설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오답피하기 ②, ③ 대통령이 검찰총장, 행정 각부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②, ③).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②).

9. 시민 혁명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프랑스 혁명(1789)의 산물인 프랑스 인권 선언이고, (나)는 미국 독립 혁명(1776)의 산물인 미국 독립 선언이다. ㄴ.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모두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ㄹ.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모두 전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유 이념을 주창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프랑스 인권 선언은 전제 군주정을 입헌 공화정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제 군주정을 입헌 군주정으로 전환시킨 것은 권리 장전이다.

ㄷ. 프랑스 인권 선언은 신분제 폐지의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보통 선거가 확립된 시기는 20세기 초반이다.

10. 민주주의의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국민 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크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는 대의 민주제이고, (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ㄱ. 대의 민주제에서는 국민이 대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ㄴ. 시위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도 참여 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오답피하기 ㄷ. 국민 발안은 대의 민주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제에 해당한다.

ㄹ. (가)에 비해 (나)는 시민들 간의 연대를 중시한다.

11.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어지고 여러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본 문항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을 묻고 있다. ㄱ.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의회 운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간의 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 ㄴ. 입법 과정에서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여러 정당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이전보다 더 잘 반영될 것이다.

오답피하기 ㄷ.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은 여러 정당 간의 경쟁 속에서 강화될 수 있다.

ㄹ. 양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양당제는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되고,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당 간 연합에 의해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반영이 용이하지만,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12. 범죄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병은 이들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풀이의 단서이다. ㄴ. 병이 갑, 을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을 친 것은 정당방위가 되므로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처벌받지 않는다. ㄷ. 갑, 을이 병을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갑,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오답피하기 ㄱ. 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 아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병이다.

ㄷ. 병이 갑을 친 행위는 위법성 조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병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소년 보호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문두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라는 표현이 풀이의 단서이다. ③ 소년 보호 사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이 보호 처분으로서 부과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소년 형사 사건이다.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법관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

④ 보호 처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항소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항소를, 결정이나 명령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14. 부동산 계약의 법적 문제 탐색

정답 해설 :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 계약에 따라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상에 그 이전 내용이 기재됨으로써 취득되는 것이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등기까지 완료해야 A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답피하기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받은 이후에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등 법정 해제 사유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입주한 후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5. 근로 시간과 부당 해고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은 근로 시간과 부당 해고의 핵심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육아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해당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제도로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법원을 통한 구제 제도가 있다.

16. 근대 민법의 3가지 원칙의 수정 이해

정답 해설 : 근대 민법의 3가지 원칙 중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각각 수정되었다. 따라서 (가)는 계약 공정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ㄴ. 약관에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 공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이다. ㄷ.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다.

오답피하기 ㄱ. 계약의 일종인 사실혼도 사실혼 관계의 부당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ㄷ. 무과실 책임이 가족의 연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7. 보안 처분의 개념 이해

정답 해설 : 형벌만으로는 사회 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거나 형벌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벌이 아닌 형사 제재이므로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보안 처분은 형벌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② 형사 제재의 주체는 국가이어야 한다.

③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보안 처분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시문의 ‘형벌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는 표현에서 추론할 수 있다.

18. 헌법 소원 심판의 두 가지 유형 구별

정답 해설 :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가)와 (나) 모두 헌법 소원 심판으로,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국가 기관은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신청하는 것이며, 권한 쟁의 심판은 권한의 다툼을 다루는 기관이 신청하는 것이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제기되는 것이다.

④ 대통령령은 법률이 아닌 명령에 해당한다.

19. 분쟁 해결 방안의 개념과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민사 조정 제도, 소액사건 심판, 가압류, 강제집행, 공증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ㄱ. 갑은 소송에 앞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을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중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ㄴ. 갑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을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 내지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가액(2억 원)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사건 심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미리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에는 굳이 승소한 판결문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0.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각종 법률행위의 적법성, 유효성 등을 묻는 문항이다. ③ 판매자가 매매 계약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한국 소비자원 등에 피해 구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노조 설립 및 가입은 헌법 및 노동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의 근로 계약은 이른바 ‘황건계약’으로서 무효이다.

② 친권자는 자녀의 부모만 해당되므로 밑줄 친 ㉠ 중 ‘조카의 친권자’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를 얻더라도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⑤ 15세 이상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에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은 동의만 해줄 수 있을 뿐이며, 근로 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할 수는 없다. 근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만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